



주간통일정세 2008-49(2008.12.01~12.0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美, 김정일 건강 심각하다고 판단(12/5, 요미우리신문)**
 - 미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김 위원장의 실각 또는 사망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미국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시 김 위원장이 건강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봤으나 그후 정세 분석에서 김 위원장의 용태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 좌반신(左半身) 불수인 김 위원장이 핵 문제를 포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는고 봄.

- **김정일의 유력 후계자는 미공개 아들(12/2, 텔레그라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2일 (현지시간) 보도, 텔레그라프는 북한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보도
 - 시게무라 교수는 "지금까지는 김정남과 김정철을 지지하는 두 세력 사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아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
 - 그는 "이 아들은 현재 30대로, 군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왔다"며 "그가 군부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시게무라 교수의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김정일의 후계자와 관련한 추측들이 잇따르고 있음.

- **김정일, 동물원 시찰사진 공개(12/2,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보수 공사가 끝난 평양의 중앙동물원을 현지 지도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TV가 2일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 14장을 포함한 동물원 현지지도 관련 사진 27장을 공개
 - 중앙TV가 이날 저녁뉴스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실내 외를 막론하고 시중 선글래스를 낀 채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만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왼손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 김 위원장은 동물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오른손에 낀 장갑을



수차례 벗기도 했으나 역시 왼손 에 낀 장갑은 벗지 않음.

● **김정일, 양손 머리높이 들어 박수(12/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제기 이후 처음으로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장갑을 낀 양손을 머리 높이에서 세운 채 박수를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됨. 조선중앙TV가 1일 오전 공개한 그의 북한 공군 제1016부대 시찰 사진 36장 가운데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16장임.
- 종래와 마찬가지로 선글라스와 회색 파카 차림의 김 위원장은 추운 날씨 때문인 듯 진한 갈색의 방한모와 회색 방한장갑을 끼고 있음. 이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실외에서 수행원 및 현지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거나 실내에서 양쪽 벽에 붙은 선전물을 보며 걷은 모습, 지휘관들 앞에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말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음. 또 의자에 앉아 오른팔을 등받이에 걸치고 왼팔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진도 있음.
- TV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군인들 사진에 이어 김 위원장이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박수를 치는 모습과 두 손 다 머리 높이까지 지켜들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음.
- 김 위원장은 실내에서도 내내 방한장갑을 양손 모두에 끼고 있으나, 실외에선 오른손은 맨손인 채 왼손에만 장갑을 끼고 걷는 사진도 2장 공개되었음.

나. 정치 관련

● **北조평통, 南 책임전가는 도발행위(12/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12.1조치’와 관련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책동은 북남관계 파탄의 주범으로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북침전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이라고 주장,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태가 빚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남북관계 위기 南책임 주장(12/4,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4일 ‘죄 지은 자들의 발버둥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북한의 제한·차단조치는 남한 정부의 “반공



- 화국(북한) 대결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남한측이 ‘상투적 협박’ 등이라고 시비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의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더 늦기전에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대북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인용 보도
 - 노동신문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정치 송장’ 제목의 논평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불건전한 남북교류 정리’ 등 대북 발언에 대해서도 “반민족적 추태”라고 비난

● **北, 경제난 속 이상화물 건립 확대(12/4,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 결속을 위해 북한 전역에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고 이상화하는 시설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
-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97.10)된 이후부터는 각 지역에 김일성 부자를 주제로 한 모자이크 벽화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혁명사적 표식비 등도 속속 세우는 추세임. 모자이크 벽화란 썩씨 1천200도에서 구워낸 색 유리나 타일 또는 가공된 천연석 등을 벽체에 붙이는 방식으로 김 주석 개인이나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모습, 김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얼굴 등을 주로 담고 있음. 모자이크 벽화는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 시, 군, 리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북한 곳곳에 건립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엔 1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엔 4개가 건립됐다고 보도됐고 2003년부터 19개로 급격히 늘어나 2004년 49개, 2005년 70개가 이어 2006년에는 55개, 2007년에는 67개였다가 올해의 경우 11월 말 현재 88개에 달함.
- 모자이크 벽화의 규모도 대형화 추세, 일반적으로는 길이와 높이가 각각 5~10m 정도이지만 최근엔 길이 30여m, 높이 20m가 넘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2007년 4월 김 주석의 95회 생일을 맞아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와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세워진 벽화로써 김일성 부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변영하여라’는 길이와 높이가 각각 42m와 25m에 달함.

● **남북 함정통신, 사실상 기능상실(12/3, 연합뉴스)**

- 남북이 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04년 6월 개통한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국방부는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남북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란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남측은 함정간 국제



상선통신망을 통해 104회 호출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 응답했다”면서 “충돌방지 합의사항 이행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간 함정교신 횟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11월에도 북측이 응답한 횟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답변

● 北매체, 서방 인권공세 용납 불가(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인권유린 왕초들의 주제넘은 짓이라는 글에서 11월 채택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제안된 데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1일 주장
- 통신은 특히 일본과 EU는 “침략전쟁, 살인전쟁을 감행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국”으로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논란 자격을 잃은 나라들”이라며 “오늘에 와서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쟁에 자기 나라 병력을 파견하였던 것도 바로 일본과 EU의 성원국”이라고 비난, 통신은 그러나 남한이 이번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다. 경제 관련

● UAE 기업, 대북사업 진출(12/6, 자유아시아방송)

-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들이 최근 대북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RFA에 따르면 UAE의 투자회사인 아부다비 투자회사(ADIC)는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오라스 인베스트를 11월 약 1억8천만달러에 인수했음. ADIC는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오라스 인베스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게 되며, 오라스콤측은 이 회사를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
- ADIC측은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업에 당장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 기간을 거친 뒤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또 얼마 전에는 UAE의 다른 기업이 광산 개발권을 대가로 평양 류경호텔의 재건축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UAE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이 류경호텔에 관심을 나타내고 2007년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그가 류경호텔의 자금 지원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RFA는 보도

● 北, 상습범람 北대동강 제방 낮춰(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월 강안(둔치) 정리공사를 끝낸 평양의 대동강 일부 구간의 제방 높이를 풍치를 감안해 공사 이전보다 낮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은 평양 옥류관과 충성의 다리 사이의 대동강 제방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 “이번에 이미 있던 제방을 낮춘 것은 대동강의 하류에 서해갑문이 건설되고 강을 따라 올라가며 미림갑문, 봉화갑문, 성천갑문, 순천갑문 등이 일떠서 수위 변화가 조절돼 큰물 피해를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통신은 “제방의 높이가 낮아져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동평양지구가 풍만한 대동강의 흐름과 어울려 더욱 환하게 안겨오게 됐다”면서 “강안에는 도로들이 새로 형성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나무들로 원림이 조성됐다”고 보도.

* 평양시는 2007년 4월 대동강 ‘강안 정리공사’ 1단계 공사를 마친 데 이어 2008년 5월 2단계 공사를 시작했었음.

● 北라선시, 경공업공장들 생산정상화 박차(12/5, 조선중앙방송)

- 지난 1991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던 북한의 라선(라진·선봉)시의 경공업공장들이 생산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
- 방송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두 달이나 앞당겨 끝낸 라진음료공장과 라선어린이식료품공장, 라선식료공장, 라진가구공장, 라선제지공장, 선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라진가방공장의 일꾼과 노동자가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고 소개, 이들 공장에선 “원료와 자재보장 사업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날마다 맛있는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올해 쌀수확량 140만t(12/5, FAO;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올해 쌀수확량은 140만t으로 작년 120만t에 비해 20만t 증가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서 또 외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되는 쌀 60만t을 포함하면 2009년까지 북한의 가용 쌀은 2백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
- FAO는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 역시 작년 1백30만t에서 올해 1백9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양은 20만t으로 작년의 70만t보다 적어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은 올해 2백만t보다 약간 늘어난 2백1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을 제외한 도정하지 않은 곡물의 수확량은 2007년보다 1백50만t보다 60만t 늘어난 2백1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음.
- 앙리 조세랑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를 맞추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 또 폴 리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도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 수치들은 북한에 식량 부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 **北-싱가포르, 투자 협정 조인(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2일 싱가포르에서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리룡남 무역상과 림 흥 키앙 싱가포르 무역공업장관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이날 북한 상업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맹은 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보도
- * 북한과 싱가포르는 1975년 11월 수교

● **북-예멘, 협조 합의서 조인(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예멘총인민대회가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와 압둘라흐 아흐메드 가남 예멘총인민대회 총위원회 위원 겸 정치부장이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北냉면명가 모란각, 청량음료점 변신(12/2, 조선신보)**

- 평양시 모란봉구역 모란봉 산정에 위치한 ‘냉면명가’ 모란각이 청량음료점으로 변신한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신문은 “모란각 기본 건물에 잇달아 산지세를 그대로 2층으로 된 식사실과 자연미 그대로의 노천식탁이 새로 건설됐다”면서 이같이 보도
- 모란각의 이런 변신은 지난 6월 5일 개보수를 마친 모란각에 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란봉을 찾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도록” 청량음료 판매시설을 새로 갖출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
- 새 시설은 청기와를 씌운 전통건축기법의 2층짜리 식사실과 야외식탁 코너로 나뉘져 있으며 1층은 전면 통유리로 둘러막힌 130석 실내 식사실로, 2층은 96석의 개방형 식사실로 각각 꾸며짐.

● **北, 연말맞아 증산투쟁(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말을 맞아 각 경제부문의 연간 생산계획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독려하는 ‘연말전투’를 대대적으로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1일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신년)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문평제련소와 상농, 리원, 은파광산 등의 생산혁신 소식을 보도
- 북한 내각의 경공업성 김기철 처장은 11월 30일 방송에 출연, 올해 북한 당국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구호로 내건 사실을 상기하며 신의주, 사리원방직공장과 삭주, 해주직물공장 등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 산하 공장에서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

- **北, 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 우선 강조(1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글에서 1일 국방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강력한 국방력을 다지는 동시에 경제 전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상기시키며 경제 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소개한 뒤 “오늘의 시대는 국방공업의 발전 정도에 의하여 국가 경제력이 좌우되는 시대”인 만큼 “국방공업이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여야 자립적이며 튼튼한 경제 토대를 축성할 수 있다”고 강조

라. 사회·문화 관련

- **상하수도 개선사업 적극 추진(12/7, 평양방송)**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7일 보도, 평양방송은 내각 도시경영성에서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상하수도 관리가 새로운 높이에서 진행되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평양시 식수 생산능력을 수요에 맞게 조성하는 동시에 평양시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2008년도 결산(12/7, 조선중앙방송)**
 - 2008년도 한 해 동안 10여 개 단위가 ‘3중 3대혁명붉은기’를, 210여 개 단위가 ‘2중 3대혁명붉은기’를, 880여 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각각 쟁취했으며 이 과정에 12만 5천370여 명의 ‘3대혁명 기수’들이 배출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보건성, 신형 소독기 보급(12/5,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이 음이온과 오존을 동시에 발생시켜 실내 공기를 소독하는 ‘음이온오존발생 소독기’를 새로 만들어 수술실, 소독실, 병실 등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 **北,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12/5, 평양방송)**
 - 북한 각 지역에서 올해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설비와 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양방송이 5일 보도, 방송은 “종합된 자료”를 인용해 “전국 각지의 후원단체들에서 교육기관들에 3천500여종에 114만점에 달하는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 수많은 학교보수용 자재와 설비를 지원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황해북도는 2008년내에 도내 각급 학교에 수천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계획을, 황해남도 당위원회는 학교마다 교육용 녹화촬영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각각 추진, 또 평양시는 시내 모든 학교의 교실에 다매체 교육을 위한 교육설비를 지원했고, 함경남북도과 평남북도도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계획을 진행

● **北, 한의학 전자사전 제작(12/5, 조선신보)**

- 북한의 한의학 연구기관인 고려의학과학원은 최근 한약재와 처방, 경락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매체 전자사전’을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5일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이 사전에는 2만9천700여개의 한의학 용어, 수천여개의 한약재와 처방 등은 물론 조선 후기 한의학자인 이제마와 동의보감 편찬자인 허준 등 수십명의 인물자료, 수백건의 문헌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사전은 지난 10월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19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 **北당국, 평양서 휴대전화 재개통(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2월 중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 말을 인용해 보도, 이 무역업자는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에서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에게 기기를 대당 700달러에 판매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며 “1차적으로 평양에서 개통하고 차츰 도·시·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언, 그러나 그는 “휴대전화 사용을 당 간부나 특정인에게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반주민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언급
- 이번 휴대전화 재개통은 올해 1월 사업권을 따낸 이집트의 오라스콧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오라스콧은 지난 5월 시험 통화에 성공했음.
- ‘러시아의 소리’ 방송도 최근 “오라스콧이 15일 평양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며 “(북)조선에 곧 새로운 이동통신회사와 인터넷회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도

● **北주민들, 오바마 당선에 북미관계 개선 기대(제255호, 오늘의 북한 소식; 12/3, 연합)**

-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보도
- 북한 주민들은 북미관계 개선의 효과로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쓸 돈이 자신들의 생활 개선으로 돌려지거나 군대에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등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지에 따르면 강원도 원산시장의 한 주민은 “노예로 미국에 팔려 온 조상을 둔 후손인 만큼 잘 사는 자본가 출신의 역대 백인 대통령 들처럼 오만무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제 중고품을 판매 하는 김모씨는 “조미관계가 좋게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핵 무기를 만들거나 원거리 미사일 개발에 인력과 재력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 부담도 적어지고 생활도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평양시의 한 간부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군사력을 더 과시해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겠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당당하고 강경하게 나서야지 조금이라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보건성, 에이즈 예방사업 강화(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봉훈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세계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인 1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기구(UNAIDS)를 비롯한 국제기구·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에이즈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상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에이즈의 날 행사 개막연설에서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이날 행사에는 북한의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간부들과 북한 주재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 北김향옥, 세계女복싱대회 금메달(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여자 복싱선수 김향옥이 11월 22~29일 중국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복싱선수권대회 50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 김 선수는 지난 9월 인도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여자복싱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받았음.

● 北, 전역 도서관의 전자화 추진(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 11월 19일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의 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온 나라 도서관을 전자도서관화” 하도록 지시한 결과 9월 현재 “각 도 도서관들이 우리 식의 봉사운영 방식과 현대적인 정보설비들에 기초해 독자들에게 대한 정보 봉사를 시작한 데 이어 시, 군(구역) 도서관들에서 정보봉사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각 도 도서관들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정보봉사 중심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며 자강도,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도서관이



이미 전자도서관으로 개축됐고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량강도에서는 “전자도서관화 되는 도서관의 품격에 맞게 새 도서관을 일떠세울(건립할) 목표를 내세우고 건설전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北, 라면 대량생산 통해 식량난 극복(12/1, 연합)

-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라면 대량생산에 나서고 있음. 북한을 상대로 무역과 임가공사업을 하는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들에게 라면을 대량 공급하고 외화벌이도 하기 위해 라면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 북한은 이를 위해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옆 전진동 3만평 부지를 한국의 대북사업체인 (주)G-한신에 제공하고 하루 빨리 라면 대량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중임. 전종무 (주)G-한신 대표는 “지난달 21일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2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언급, 전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월간 최대 1천80만 봉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50%는 주민들 공급용으로 배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국 등 외국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답변
-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홍콩 자본 유치를 통해 평양시 대동강변에 북한 최초의 라면공장인 ‘대동강 즉석국수’ 공장을 건설한 바 있음. 그러나 라면공장 가동에 필요한 중유 등 연료 부족으로 북한 국산 라면이 자취를 감추면서 북한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면은 중국산 등 대부분 외제임.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삼흥동에 위치한 평양밀가루 가공공장에 무연탄 보일러를 설치하고 북한산 밀가루를 원료로 국산 즉석국수 생산에 들어갔음.
- 또 전라북도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평양시 만경대구역 식품가공단지 안에 라면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12/7, 연합)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에서 8일 개막하는 6자 수석대표회담을 앞두고 7일 러시아측과 양자 회동,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 만나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한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을 논의
- 김 본부장은 오후 4시부터는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및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질 계획
 - 김 본부장은 앞서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6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른 곳과 양자 접촉을 가지지 않은 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외무성, 日, 6자 수석대표회담서 상종 않겠다(12/6, 북한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6일 일본이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의 경제적 보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일본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이 “10·3합의 이행이 마감단계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도 “회담에는 계속 주제넘게 참가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설사 일본이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염치없이 회담장에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일본을 참가국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 중 유독 일본만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전혀 해오지 않았으며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6자회담 밖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경제보상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없어도 10·3합의는 이행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그러나 이 회담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회담의 기본과제는 “우리(북한)의 무력화(불능화) 속도에 비해 뒤떨어진 5자의 경제보상 속도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맞게 따라세우며 검증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 시료채취 명기는 동시행동원칙 부정(1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북한이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 조선신보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10월 초 방북 때 북미 간에는 “현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하게 될 검증조치만 문구로 합의”했을 뿐 “시료채취는 상정되지 않았다”며 “핵문제의 핵심당사자들인 조(북)미 쌍방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불능화)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검증방법을 실



- 시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결국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부정하고 비핵화 과정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생트집이나 같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과의 (평양)합의는 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한정했으나 이것은 조선측이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에 제기될 검증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검증문제에서도 단계론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문제를 이번 회답이 아닌, 추후 비핵화 3단계에서 논의할 입장을 밝힘.
 - 신문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 이행의 완결을 위한 회합”이고 “협상의 초점은 늦어진 5자의 경제보상을 마무리짓는 전망을 뚜렷이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
 - 또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싱가포르 양자회동을 언급하며 “어렵게 마련된 조미(평양)합의를 다자외교의 틀거리안에서 확인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전망은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시료채취 명문화가 쟁점이 될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마지막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것임을 내비침.
 - 이어 6자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날짜를 주최국인 중국이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미 국무장관이 공개발언을 통해 먼저 제시했다며 “임기 말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에도 2단계를 빨리 매듭짓고 대조선 정책의 제주봉을 차기 정권에 정확히 넘기려는 의향이 있는듯 하다”고 평

● 北·美, ‘시료채취’ 합의도출 못해(12/6, 연합)

- 북한은 4~5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한 미국의 절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이번 북미 회동을 통해 시료채취 명문화를 포함한 검증의 정서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다시 이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핵 6자 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5일 오후 싱가포르의 미국 대사관에서 2차 북미회동이 끝난 후 북한 대사관저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간에 걸쳐 10·3 합의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 문제를 논의했다”며 “시료채취는 검증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검증방안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토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크게 합의보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 쌍방의 목적을 조율하는게 목표였다”고 답변
- 힐차관보도 기자들에게 “북한 측은 지난 10월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했으나 그것을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노출됐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그들이 이를 문서에 담



아내려고 하는가다”라고 답변

-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제시한 절충방안에 대해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수용하면 문서형식은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은 방안과 구체적인 표현을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검증 단계를 세분화해 각단계별 이행의정서를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최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8일 오후에 시작해 10일 오후 폐회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게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8일 회담개최에 반대없다”고 답변
-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참가국들은 회담 전인 6~7일 베이징에 모여 8일 오전까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갖고 시료채취를 핵으로 하는 검증의정서 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중, 6자회담 8~10일 개최 비공식 통보(12/5, 연합)

-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을 12월 8일부터 베이징에서 갖자고 참가국들에 비공식 통보, 외교 소식통은 5일 “중국이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각 나라에는 알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참가국들은 6~7일 회담장인 베이징에 모여 8일 오전까지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개별적 양자협약에 언급, “일요일 오후 한·미·일 3국 마지막으로 협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요청은 다 해냈다”면서 “우다웨이 부부장이 경협 관련 업무로 국외에 있어 (중국과 일정은) 마지막에 잡힐 것”이라고 전언

● 김숙, 한미일,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 완료(12/3,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급적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 2단계(핵불능화 및 핵신고)를 매듭짓고 3단계(핵포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언급
- 비핵화 2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따른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초 10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김 본부장은 8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 “3국은 합의에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떤 종류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거기엔 시료채취가 의심의 여지없이 임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 그는 또 일본이 납치문제 진전을 조건으로 걸며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북 증유지원 20만t에 대해 “국제모금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국제모금을 하더라도 6자회담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북, 키신저에 평양방문 요청(12/6, 연합)

-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나라당 한미비전특위의 정몽준 위원장은 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면담했을 때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 정 위원장은 “키신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하라고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방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언

다. 북·일 관계

● 日경찰, 조총련 산하단체 간부 체포(12/3, 연합)

- 일본 도쿄 경시청은 3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 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재일본 조선도쿄도신주쿠상공회 간부인 엄모(33)씨를 체포,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소속 회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시청은 앞서 11월 27일에도 신주쿠상공회 전 간부인 서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
- 경시청은 상공회의 다른 직원들도 무자격으로 세리사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 조총련측은 경찰의 잇단 조총련계 인사 체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

● 北,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 없어(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정치난쟁이의 주제넘은 행실’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해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고 우선 과거 청산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촉구
- 노동신문은 최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합법성’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으며 또 그럴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고 주장

● 北, 日과는 반드시 결판볼 것(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국제적 망신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평



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등을 지적, “일본과는 반드시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주장

라. 기타외교 관계

● 몬테네그로 대사에 조승주 겸임(12/7, 조선중앙방송)

- 조승주 몬테네그로 주재 북한대사가 12월 1일 필립 부야노비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불가리아 주재 대사인 조 대사는 마케도니아, 터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대사를 겸직

* 북한은 2006년 6월 신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몬테네그로와 2007년 7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음.

● 체육지도자대표단 라오스 방문(12/6, 조선중앙방송)

- 박학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이 6일 항공편을 이용해 라오스 방문길 올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3. 대남정세

● 北, 12·1조치전 민경련 베이징사무소 재가동(12/6, 연합)

- 북한의 ‘12·1조치’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가 폐쇄되기 직전 북한이 또 다른 대북사업 협의채널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직원을 다시 상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6일 정부와 업계의 남북경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직원이 자리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1월말부터 실무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대북사업 컨설팅업체인 포원비즈의 김병수 대표는 “임시로 나와 있던 삼천리 총회사 관계자가 10월 중순 떠난 이후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2·1조치 사흘전 쯤부터 실무 직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
-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경협협회사무소를 폐쇄한 후에도 남북경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자체 계획에 따라 직원을 파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
- *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는 대북교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민경련 단둥(丹東) 대표부와 달리 IT관련 업무로 특화돼 있음.

● 개성공단 인력 4일 철수 완료(12/4, 연합)

-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시체류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력들의 철수가 4일 마무리될 예정,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



- 에서 “오늘 오후 3시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비상주 체류인원 16명이 철수함으로써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고 언급
- 김 대변인은 “원래는 어제 철수를 다 해야했지만 탑승 차량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져 오늘 오후 3시에 복귀하는 것으로 됐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오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그는 이어 “금강산 지구는 순조롭게 철수가 진행돼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오늘 내국인 8명, 중국인 23명이 철수함으로써 100명으로 잔류인원이 최종확정된다”고 언급
 - 통일부는 또 12·1 조치 이후 상주체류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던 조치를 12월 4일 부터 해제, 북측이 허용한 방북은 일단 신청한대로 허가
 - 김 대변인은 현대아산이 12월 2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된 상황과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이나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힘.
 - 4일 현재 북한 지역에는 개성공단에 상주체류자 668명과 일시체류자 7명, 금강산에 59명, 평양에 일시체류자 20명, 해주지역에 모래채취사업 관계자 19명 등 상주체류 727명과 일시체류 46명을 합쳐 모두 773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 대북 인도지원 물자 개성 수송 차질(12/2, 연합)

- 북한이 개성방문 차량을 하루 450대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지원물자 북송도 차질을 빚고 있음.
- 개성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의 윤유선 실장은 “3일과 4일 각 5만장의 연탄을 25t 트럭 8대에 실어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개성지역을 드나들 수 있는 차량 쿼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9일이나 연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힘.
- 윤 실장은 “지난 28일 통일부에 차량 방북을 신청했지만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자수송 차량을 중심으로 선착순 접수가 끝났더라”면서 “인도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北, 개성공단 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12/1, 통일부)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일 “북한이 11월 30일 밤 11시 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口頭)로 개성공단 상시 체류(상주)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 8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1700여명의 절반 수준이어서 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예상됨. 다만 북한은 880명 외에 기존 체류증을 가진 남측 인원(4200여명)의 방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최장 7일간 허용하겠다고 밝혀, 실제 개성지역 체류 인원은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

● 北, ‘금지물반입’ 방북자 6명 돌려보내(12/1, 연합)

-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 조치 시행 첫날인 1일 북측이 사전 허가를 받고 출경한 우리 측 인사 6명을 금지물품 반입 및 서류 미비 등 사유로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됨. 정부 소식통은 “오늘 방북 승인을 받고 경의선 남측 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한 인원과 차량 중 인원 6명과 차량 5대가 북측 CIQ에서 체류증 불소지 등 서류미비,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1명, 1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즉시 되돌아왔다”고 전언



〈첨부1〉 개성공단 인력 관련 北통지 [전문]

다음은 통일부가 1일 밝힌 북측의 통보 내용.

1. 12월1일부터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서 증명서 유효기간내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위원회 27명 ②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③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④송악프라자 그밖의 건물에 있는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오락시설(위락장) 경영인은 체류할 수 없다, ⑤송악프라자의 식당, 숙소 경영관리인 5명 ⑥송악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⑦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병원 2명 ⑧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 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7명) 800명
2. 12월 1일부터 승인된 인원의 체류 형식과 방법
①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체류 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교체인원이)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②그밖의 다른 모든 업체 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 인원수 범위안에서 임의 날짜에 교대 체류할 수 있다.
③승인된 상시체류인원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은 7일만이다.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 제재를 적용한다.
④출입변경은 본인병 위급, 부모형제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출입을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은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 출입을 중지시킨다.
⑥승인되지 않은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
3. 하루 출입 인원과 차량의 출입은 군사통지문에 지적된 대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상시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12월 1일 오전 9시까지 작성하여 출입국사업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이며 그밖의 인원은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72시간) 수속하고 내보낼 것이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힐 “시료채취, 검증의정서의 한 부분”(12/7)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7일 “시료채취가 상당한 관심사인 것은 알지만 시료채취는 검증의 정서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이날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 및 러시아와의 양자 회동을 마친 뒤 숙소인 베이징 차이나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가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시료채취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의 양자 회동에 언급, “군축과 검증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단계이며 러시아가 매우 건설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같은 견해를 북한 측에 전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일본을 6자회담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포함시키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북한에 일본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일본과 만나지 않는다면 나의 충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힐 차관보는 8일 오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6자 수석대표회담 개막 이전에 북한과 양자회담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남북 6자 수석대표 내일 오전 양자회담(12/7)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내일 오전 중 다오위타이에서 북한과 양자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회동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8일 오후 3시 개막하며 그 이전에는 의장국 중국이 각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면 검증의정서 채택과 비핵화 2단계 완료, 비핵화 3단계 준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료채취 명문화’에 언급,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 그리고 미국, 한.미.일 3국이 정리한 수준에서 명확한 톤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검증은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매우 오랜 시간에 시행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과정에 걸쳐 (검증의정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북한의 불능화 조치와 나머지 나라의 경제.에너지 지원에 관한 시간계획 작성 ▲비핵화 3단계의 예비적 의견교환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숙 “비핵화 2-3단계 ‘연결고리’ 회담..낙관못해”(12/7)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에서 8일 개막하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7일 수석대표회담 참석차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대북 중유지원)와 3단계(핵포기)를 잇는 연결고리 성격의 회담으로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검증의정서 채택 ▲비핵화 2단계 완료 시점 재조정 ▲3단계에 대한 예비 논의 등이 이번 회담의 의제라고 소개한 뒤 “특히 검증문제는 비핵화 전 과정에 걸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본부장은 “검증의정서에는 검증의 방법과 주체,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힌 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채취의 명문화 여부에 대해서는 “회담장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 그는 “회담은 사흘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회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한·미·일 수석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남북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김계관 “일본 대표단 만날 계획 없다”(12/7)

-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6일 “(6자 회담에서) 일본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4~5일 싱가포르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북·미 수석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향하기 직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무성 담화대로 행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북한 외무성은 이날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일본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부상은 또 6자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럼”이라고 짧게 답했다.



- 이날 오후 싱가포르항공편(SQ810)에 탑승한 그는 오후 11시께(현지 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주중 북한대사관 차량에 올라 시내로 향했음.
- 김 부상은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시료채취 명문화를 포함한 검증의정서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음.
- 이에 따라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시료채취 명문화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 북미 회동을 마친 힐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해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찬을 가진 뒤 7일 베이징으로 떠나며 김 본부장도 7일 베이징에 도착함.

● 北 외무성 “6자회담서 日과 상종하지 않겠다”(12/6)

- 북한 외무성은 6일 일본이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의 경제적 보상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일본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이 “10.3합의 이행이 마감단계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도 “회담에는 계속 주제넘게 참가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설사 일본이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염치없이 회담장에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일본을 참가국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 중 유독 일본만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전혀 해오지 않았으며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6자회담 밖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경제보상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없어도 10.3합의는 이행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또 납치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없이는 경제적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고 핵문제를 구실로 저들의 군사대국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있다”면서 “이런 나라는 6자회담에 참가할 하등의 명분도, 자격도 없으며 오히려 공동의 목표실현에 저해만 줄 뿐”이라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그러나 이 회담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회담의 기본과제는 “우리(북한)의 무력화(불능화) 속도에 비해 뒤떨어진 5자의 경제보상 속도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맞게 따라세우며 검증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 북·미, '시료채취' 합의도출 못해(12/5)

- 북한은 4~5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한 미국의 절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이번 북미 회동을 통해 시료채취 명문화를 포함한 검증의정서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다시 이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6자 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5일 오후 싱가포르의 미국 대사관에서 2차 북미회동이 끝난 후 북한 대사관저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간에 걸쳐 10.3 합의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 문제를 논의했다"며 "시료채취는 검증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부상은 또 "쌍방의 관심사항과 우려사항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검증방안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토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크게 합의되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 쌍방의 목적을 조율하는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도 기자들에게 "북한 측은 지난 10월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했으나 그것을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노출됐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그들이 이를 문서에 담아내려고 하는가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차기 6자회담 전망에 언급,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특히 검증의정서의 형식과 구체적 표현에 대해 북측과 예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보다 큰 틀의 협상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 미국측은 회동에서 향후 검증활동에 착수할 때 모호성을 없애려면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서의 형식과 구체적 표현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제시한 절충방안에 대해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수용하면 문서형식은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과 구체적인 표현을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했던 것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검증 단계를 세분화해 각 단계별 이행의정서를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최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8일 오후에 시작해 10일 오후



폐회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게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힐, 6자회담 난항 예상(12/5)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싱가포르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고 핵 검증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힐 차관보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 측은 지난 10월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했으나 그것을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노출됐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그들이 이를 문서에 담아내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또한 북핵 검증 문서의 형식과 구체적 표현에 대해 북측과 예비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보다 큰 틀의 협상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 김계관 “시료채취는 좀 더 논의해야”(12/5)

- 북핵 6자 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5일 오후 “시료채취는 검증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2차 북미회동이 끝난 후 북한 대사관저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간에 걸쳐 10.3 합의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 부상은 또 “지난 10월 평양에서의 합의에 관련된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쌍방의 관심사항과 우려사항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 6자회담 8~10일 개최 비공식 통보”(12/5)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을 오는 8일부터 베이징에서 갖자고 참가국들에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 소식통은 5일 “중국이 며칠전 6자회담을 8일 오후 시작해 10일 오후 폐회하겠다고 비공식 통보했다”며 “중국이 공식발표는 안했지만 각 나라에는 알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참가국들은 6~7일 회담장인 베이징에 모여 8일 오전까지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측 대표단은 7일 오전 중국을 방문, 양자 및 다자 접촉을 가질 예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개별적 양자협약에 언급, “일요일 오후 한·미·일 3국 마지막으로 협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요청은 다 해냈다”면서 “우다웨이 부부장이 경협 관련 업무로 국외에 있어 (중국과 일정은) 마지막에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과 양자협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야기는 해 봤는데 6자회담에서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힐, 北-美 회담위해 싱가포르 도착(12/4)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기 위해 4일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
- 힐 차관보는 이날 오후 김 부상과 만나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핵 6자회담에 앞서 핵심 현안인 북핵 검증 의정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검증 의정서와 중유 지원, 북핵 불능화 일정 문제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검증 의정서는 실제 검증에 들어갔을 경우 서로 간에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김 부상과의 이번 회담에서 검증 의정서 문제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음.
- 힐 차관보는 또 “뭔가를 협상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며 “협상은 오는 8일 베이징(6자회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7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숙 “한미일,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 완료”(12/3)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급적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 2단계(핵불능화 및 핵신고)를 매듭짓고 3단계(핵포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담을 가진 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오늘 검증의정서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등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비핵화 2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따른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초 10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김 본부장은 8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 “3국은 합의에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떤 종류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거기엔 시료채취가 의심의 여지없이 임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일본이 납치문제 진전을 조건으로 걸며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 20만t에 대해 “국제모금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국제모금을 하더라도 6자회담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이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구성원과 의 양자관계, 즉 미국, 일본,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의 향후 진로와 국익에 크게 도움된다는 측면에서 양자관계 개선도 강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 이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6자회담 채널을 통해 북한을 남측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 김 본부장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수석대표회담에 대해 “사전에 (북·미간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좁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미·일)3국이 오늘 협의한 공통분모가 북·미 간 추가협의를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조만간 중국이 6자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회담은 3~4일 간 열릴 것으로 내다봤음. 김 본부장은 또 회담 개막 전에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도쿄서 회동(12/3)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3일 일본 외무성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6자회담의 의제인 북한의 핵신고 검증틀과 관련, 시료 채취를 실시하는 것을 합의 문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특히 일본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태 진전을 위한 한국과 미국측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는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음.
-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검증을 개시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시설, 계획이 검증 대상이 되는지 확실하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6자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특히 한미일간 협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완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날 회담에서는 올 10월말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및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한 향후 일정 등도 협의했음.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전후해 김 본부장과 힐 차관보, 김 본부장과 사이키 국장은 각각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음.

● “김계관, 베이징 거쳐 싱가포르로”(12/2)

-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김 부상이 2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싱가포르행 항공편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6자회담 파트너인 김 부상과 힐 차관보가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앞두고 4일부터 6일 북·미 양자회담을 갖고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인 검증의정서 채택과 관련된 ‘시료채취’ 명문화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 회담을 마친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7일께 베이징으로 들어와 8일로 알려진 6자회담에 참가할 예정.

● “힐-北관리 금주 싱가포르서 회동”(12/2)

- 오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주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1일 밝혔다.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이날 일본과 싱가포르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금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관리를 만난 뒤 싱가포르를 방문, 북한 관리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힐 차관보가 누구를 만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힐, 금주 싱가포르서 北관리 회동”<로이터>(12/1)

- 오는 8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최가 추진되는 가운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금주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
-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익명의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힐 차관보가 금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관리를 만난 뒤 싱가포르를 방문, 북한 관리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힐 차관보가 누구를 만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북한이 6자회담을 오는 8일 재개하는데 합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



지 않고 있음. 중국은 최근까지도 6자회담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美핵잠, 北도 경계대상 포함” <美보고서> (12/5)

- 미국 탄도미사일탐재 핵잠수함(SSBN)의 경계순찰 활동 가운데 60%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도 경계순찰 대상이라는 주장이 4일 제기됐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진보센터(CAP)’ 앤드루 그로토 연구원은 CAP 홈페이지에 실린 ‘2009년 핵태세검토보고서 고찰(Orienting the 2009 Nuclear Posture Review)’이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는 미국의 핵능력에 대해 소개하면서 미국은 SSBN을 14대 보유하고 있다면서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의 뱅어와 대서양 연안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잠수함기지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또 이들 SSBN함대가 288기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으며 미사일마다 6개의 핵탄두를 장착, 모두 1천728개의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밝혔음.
- 특히 이들 핵탄두의 위력은 지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 8배에서 최대 30배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
- 보고서는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SSBN의 순찰활동 가운데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였으나 지금은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SSBN들이 태평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뿐만아니라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이들 SSBN의 순찰활동의 대상일 수 있다(The targets for these patrols are likely China, North Korea, and Russia.)”라고 적시했음. 이는 유사시 북한도 미국 SSBN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北관리, 키신저에 북한 방문 초청” (1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대북특사 파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방미했던 북한 관리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음.
-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한미비전특위 위원장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달 뉴욕을 방문했던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음.
- 정 위원장은 “그러나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도록 요청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방문하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앞서 오바마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오바마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 및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전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솔티 “중국제품 성탄쇼핑 대신 탈북자에 기부” (12/4)

- 올해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수전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회장은 3일 성탄절 쇼핑시즌에 중국제품을 사지 말고, 탈북자들을 위한 모금에 기부를 하자고 미국인들에게 제안했음.
- 솔티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성탄절에 중국산 선물을 구입하지만, 그 상품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중국 정부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산 상품 쇼핑 대신에 탈북자들을 위한 모금과 기도를 하자”고 말했음.
- 솔티 회장은 또 5일은 워싱턴D.C.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6일에는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번 집회에는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재미 사업가 스티브 김, 탈북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탈북자 출신 조진혜 씨 등도 참석함.

● “오바마, 핵해지 최우선 순위 삼아야” (12/3)

-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당면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뒤야 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2일 밝혔음.
-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된 미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 위원회’는 이날 ‘위기에 빠진 세계(World at Risk)’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능력 확보 노력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지에 대한 의혹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로는 풀 수 없는 핵확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전 세계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핵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오바마 차기 정부에 대해 북한측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 및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폐기대상에 삼아야 한다고 지적.



- 이 위원회는 보브 그레이험 전 상원의원(민주·플로리다주)을 위원장으로 제임스 텔런트 전 하원의원(공화·미주리주) 등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두루 참여, 초당적으로 구성됐음.

● 北 대미 협상라인-美 파트너들 구면 많을 듯(12/2)

-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현재와 앞으로 북한의 대미 협상라인은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상대했던 인물들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클린턴 행정부 사람들이 다수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앞으로 4년간 북미간 협상 파트너들은 이미 10여년 전에 상대의 협상 기술과 습성을 꿰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음.
- 차기 미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임기말 북한 방문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클린턴 내정자는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무장관 시절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경험이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등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지휘했던 인사들의 자문을 받아온 만큼 이들의 대북 경험이 클린턴 내정자의 대북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됨.
- 오바마 차기 행정부 시대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주요한 북한 인물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그는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 주역으로 북미 협상 역사의 북한측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는 최근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수행인물로 자주 등장, 외교참모로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음.
- 1994년 제네바합의 때 차석대표로, 수석대표인 강석주 제1부상을 도와왔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미국 민주당의 대북 협상가들에 익숙한 인물. 김 부상은 부시 행정부 때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담판을 통해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북미협상의 실무주역으로 나서기 전인 클린턴 행정부 때도 북미 미사일 회담과 테러관련 회담 등에 북측 수석대표로 활동했고, 1994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영접하기도 했음.

● “美 대북특사 파견, 김정일 건강이 변수”<RFA>(12/2)

-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주창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차기 미 행정부에서 특사 파견안이 활기를 띠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클린턴 내정자는 지난 2005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대북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 미국 관리를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프로



그램 부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대한 안을 내놓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일반사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은 구상이라고 본다”면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시점”을 파견 적기로 제시했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 자문진에 포함된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설령 미국이 모종의 고위급 접촉을 먼저 시도하고 싶어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는 아주,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북한체제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펼쳐나가는 데 진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 혹은 다른 어느 나라 정부가 설령 북한 지도층을 상대로 직접 대화의 문을 열고 싶어도 김 위원장의 신체적인 능력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선 아주 힘들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음.

● “北 국제금융 편입엔 투명성 필수” <美고위관리>(12/2)

- 북한이 국제금융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별개로 국제금융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의 페트릭 오브라이언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가 밝혔음.
-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1일 미 재무부 주관으로 열린 ‘도둑체제(Kleptocracy)’에 관한 민관 합동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후에도 미국의 북한관련 자산이 여전히 동결상태인 점에 대해 “이 문제는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테러관련 국가·조직의 미국내 자산동결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동결자산을 3천200만달러로 추산했음.

● 오바마 “北.이란으로의 핵무기 확산 막아야”(1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차기 행정부의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시카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오바마 당선인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해결해야 할 외교과제로 북한과 이란 핵무기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항구적 평화 추구문제, 국제기구 강화문제를 거론하면서 “힐러리아말로 의심의 여지없이 이 같은 야심찬 외교어젠다를 나와 함께 해결해 나갈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다. 중·북 관계

● 수출길 막힌 북한산 대게…中서 혈값 세일(12/2)

- 한국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취급받는 북한산 대게가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몸값’이 폭락했다. 1일 옌지(延吉)시 중심에 위치한 서시장에서는 전날 밤 북한 라진항에서 산채로 직송된 대게가 1kg에 30위안(약6천100원) 선에서 팔리고 있었다.
- 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게는 1마리 무게가 1.5kg에 육박하는 대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알을 밴 암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 정도 크기를 지닌 영덕대게가 1kg에 8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혈값임. 북한산 대게는 주요 수입국이었던 일본이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착수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 그나마 한국으로 나가던 물량이 있어 근근이 가격 폭락까지는 면할 수 있었지만 옌지에서 북한산 대게를 취급하던 한국인 사업가들까지 철수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산 대게는 결국 라진항과 가까운 옌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 일·북 관계

● “美 김정일 실각 전제 대책 강구”<요미우리>(12/5)

- 건강 악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병세와 관련, 미국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보고 김 위원장의 실각 또는 사망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워싱턴발로 보도.
- 신문은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또는 15일에 뇌졸중을 일으켜 중국, 프랑스에서 온 의사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고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때 김 위원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 정보 분석 결과 병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지난달 2일 김 위원장이 “건강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지만 이 소식통은 “조지 부시 정권이 김 위원장은 회복 불능 상태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하반신 불수 상태이나 핵개발 문제 등을 둘러싼 중요 정책을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전면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군부와 북한 노동당 상층부, 김정일 일족 등 3개 세력을 아우르는 집단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이 김 위원장의 복귀를 상정하고 있다면 이런 움직임을 피할 것”이라고 말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김 위원장의 실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

● 北매체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 없어”(12/3)

-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해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고 우선 과거 청산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촉구했음.
- 노동신문은 ‘정치난쟁이의 주제넘은 행실’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최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합법성’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으며 또 그럴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일제가 저지른 범죄와 일본의 과거사 청산 회피, 역사교과서 왜곡 책동 등을 지적하고 일본이 “그 무슨 ‘합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방자스럽고 주책머리 없는 추태이며 정의와 인류 양심에 대한 우롱, 모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신문은 “일본은 딴 꿈을 꾸며 주제넘게 유엔의 책임적인 자리를 탐내기 전에 과거청산을 하고 적국의 오명을 벗으며 국제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김정일 후계 문제로 혼란”<마이니치>(12/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문제를 놓고 장남인 김정남(37)의 후견인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작년말 차남인 김정철(28)을 지지하는 김 위원장 측근 이제강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김정남으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가 거부된 바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1일 보도.
- 이제강이 장성택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두 후견인끼리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져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에다 후계자 문제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北京)발로 전했다.



- 장성택은 지난 2004년 실각했으나 2년 뒤 복권돼 최근에는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01년 일본에서 구속되면서 후계 구도에서 멀어졌던 김정남을 다시 후계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철은 당 조직부 부부장이라는 최유력 포스트에 취임했음이 지난해 확인된 바 있으며 이제강 부부장이 후견인으로 당내 권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 기타

● “北, 올해 쌀수확량 140만t” <FAO>(12/5)

- 북한의 올해 쌀수확량은 140만t으로 작년 120만t에 비해 20만t 증가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했음.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서 또 외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되는 쌀 60만t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북한의 가용 쌀은 2백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 FAO는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 역시 작년 1백30만t에서 올해 1백9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양은 20만t으로 작년의 70만t보다 적어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은 올해 2백만t보다 약간 늘어난 2백10만t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음.
-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을 제외한 도정하지 않은 곡물의 수확량은 지난해 1백50만t보다 60만t 늘어난 2백1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음.
- 앙리 조세랑 FAO 세계정보조기정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를 맞추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음. 또 폴 리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도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 수치들은 북한에 식량 부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FAO와 WFP는 지난 10월 실시한 올해 북한의 수확량 조사 결과를 현재 최종 분석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

● “北, 이달중 평양서 휴대전화 개통” <RFA>(12/4)

- 북한이 이달 중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이 무역업자는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에서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에게 기기 한대당 미화 700달러에 판매하는 등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휴대전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북한의 관계자에게서 오는 10일부터 휴대전화가 개통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고 “1차적으로 평양시를 개통하고 차츰 지방의 도, 시, 군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중앙간부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반주민에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이번 휴대전화 개통은 올해 1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오라스콤은 지난 5월 북한에서 시험통화에 성공했음.
- 러시아의 소리 방송도 2일 “조선(북)에서 가까운 앞날에 새로운 이동통신관리회사와 인터넷 봉사회사가 나타나게 된다”며 오라스콤이 오는 15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 이 방송은 오라스콤 대변인의 말을 인용, “평양에 이어 다른 도시들도 곧 이동통신망에 들어갈 것이며 초기엔 평양에서 15만명의 가입자를 접수하고, 내년 상반기엔 (북한 주재) 외교대표부들과 외국단체들에 인터넷 고속접속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北, 소말리아해적 국제대책 적극 관심(12/1)

- 정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이 해적에 납치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대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인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에 피해를 당한 일이 있는 북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소말리아 앞바다가 “악마의 해역”, “공포의 해역”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
-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IMO 해상안전위원회 제85차 회의에도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 부국장을 파견해 소말리아 해적 퇴치대책 논의에 참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8일 장관급 전략대화’ 취소 합의(12/5)

- 외교부 당국자는 5일 “8일 예정됐던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이번 주 초 취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며 “이는 최근 워싱턴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와 페루 리마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유명한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충분한 대화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말 라이스 장관과의 회동은 물론 미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도 만나기 위해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추진, 이달 8일 열기로 합의했었음.
- 이 당국자는 “그 사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G20 금융정상회의가 지난달



열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만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

- 유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또 지난달 말 APEC 회담장인 페루 리마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 현안과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북핵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이스 장관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APEC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에서 이례적으로 의장국인 중국의 공식 발표 전에 6자회담 개최시기를 공개한 것도 이런 논의의 결과로 평가됨.
- 한·미는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장관이 장관급 전략대화를 처음 열어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제회의를 비롯한 다른 행사에서 양국 장관이 만나는 등 여러 일정상의 이유로 아직 두 번째 장관급 전략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오바마측 美전문가 “한미간 긴밀 조율 있을 것”(12/3)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3일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측 전문가는 북미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고, 대북 강경성향의 전문가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의 ‘과속’ 가능성을 경계했음.
-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은 이날 ‘미 대선 평가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차기 행정부(오바마 행정부)의 특정 정책을 예측하기란 어렵다”면서도 “우방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협업·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될 것”으로 봤음.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미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한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특히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때 미국이 직접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에) 큰 관심거리지만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비해 친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위원은 “한국은 오바마 당선이 오랜 침체에 빠진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취해” 있으나 그 기대감은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대통령보다는 고위급 외교 개입에 더 의욕적으로 나설 것”이나 “이런 전술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
- 한편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 정부는 건설적 방법으로 정책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스티븐스 “한반도 영구평화 구축이 한미 과제”(12/3)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한국과 미국이 “직면한 큰 과제는 안보동맹의 성공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냐는 문제”라며 이 과제의 달성을 위해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북핵 9.19공동성명에 대해 “강한 (실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어떤 미국 정부도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9.19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스티븐스 대사는 강조했다.
- 한미관계의 ‘변화’와 관련, 그는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과거보다 많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관계의 능력이 높아졌고 접촉 빈도가 많아졌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런 변화속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스티븐스 대사는 강조했다.

● 한·미, 12일 워싱턴서 SPI회의 개최(12/1)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오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0차 SPI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을 비롯한 양국 간 군사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PMC(사업관리컨소시엄)이 최종 산출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완공 시기와 소요 비용을 토대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회의에는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지만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미국 측 수석대표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SPI회의는 2~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됐음.



● 美태평양사령부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12/2)

-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최근 새롭게 수정한 전략안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삼각협력 체제 구축이 미국과 일본, 호주의 삼각 협력체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음.
- 태평양사령부는 또 새 전략안에서도 한반도 분쟁 억제를 계속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일 미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티머시 키팅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많은 아시아인과 일부 미국인들로부터 최근 몇 년간 비난의 대상이 됐던 미국의 일방주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 전략안을 지난달 승인했음.
- 다자주의에 바탕을 둔 이 전략안은 호주와 일본이 지역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삼각협력 관계를 형성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도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안은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과 같은 역내 동맹국들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감축하거나 철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따라서 태평양사령부는 이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남아 있을 것임을 확인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군사관계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미군의 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지만 태평양사령부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첫 전략대화 11일 베이징 개최(12/2)

- 한국과 중국이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오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일 밝혔음.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광야(王光亞)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권종락 한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대표로 한 한·중간 첫 고위급 전략대화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 류 대변인은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간 전략교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양국관계의 공동관심사항과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 10일 베이징에 도착하는 권 차관은 회의 후 12일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외교부장을 예방한 뒤 오후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외교 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기로 합의한 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8월 답방 기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회의의 연내 개최를 명시한 바 있음.
- 이번 전략대화는 안보, 군사 문제를 포함해 양국 현안과 국제 문제 대처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회담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됨.

다. 한·일 관계

● 韓-日 경찰, 사이버 수사 부서 ‘핫라인’ 개설(12/4)

- 일본 경시청의 요네무라 토시로우 경시총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양국의 범죄 수사공조 방안 등을 논의, 사이버 수사부서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음.
- 3일 방한한 요네무라 경시총감은 4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석기 청장과 회담을 갖고 사이버 범죄와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 국제범죄에 대한 양국 수도 경찰의 협력 방안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음.
- 요네무라 경시총감은 일본 도쿄의 치안 총수로, 2003년 이시가와 시게야키 경시총감 이후 두 번째로 한국 경찰을 찾았음. 특히 양측은 국경을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사이버 수사 부서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의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음.
- 양측은 핫라인을 통해 범죄 및 수사 정보 등을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교환하며 협력할 계획. 또 요네무라 경시총감은 김 청장에게 3만7천여명의 재한 일본인과 연 200만명이 넘는 자국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음.

● 日경찰, 조총련 산하단체 간부 체포(12/3)

- 일본 도쿄 경시청은 3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 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재일본 조선도쿄도신주쿠상공회 간부인 엄모(33)씨를 체포했음.
-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소속 회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시청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신주쿠상공회 전 간부인 서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음.
- 경시청은 상공회의 다른 직원들도 무자격으로 세리사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조총련측은 경찰의 잇단 조총련계 인사 체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日 외상 “한·중·일, 지역번영에 큰 책임있다”(12/2)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3일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첫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 “한·중·일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 큰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외무대신접견실에서 가진 한국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나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전 총리의 아들로 지난 9월 취임한 나카소네 외상이 한국기자들만 별도로 만난 것은 처음.
- 그는 한·중·일 지역협력체 구축가능성에 대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질 지는 전망하기 어렵지만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폐쇄적으로 숨기보다는 열린 형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나카소네 외상은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의 난제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이사할 수도 없는 이웃”이라며 “나라가 다르다 보면 역사에 대한 시각도 다를 수 있지만 입장 차는 상호간 차이라고 보고 한일관계는 대국적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오는 8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시료채취를 포함한 확실한 검증체계가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뒤 3일 일본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수석대표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다.
- 자민당 소속으로 참의원 4선의 정치경력을 갖고 있는 나카소네 외상은 일한협력위원회 이사장 대행을 겸하고 있으며 일한의원연맹에서 사회문화위원장을 맡는 등 외상 취임 전부터 한일관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인물.

● **李대통령 “韓日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돼야”(12/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서로의 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끔 주춤거릴 때가 있었다”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일·한 협력위원회 제44차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전 총리를 비롯해 일·한 협력위 대표단 24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 금융위기로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간 금융위기 공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 오는 13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정상회담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서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한·일, 일·한 협력위는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를 개설할 필요성에 따라 설립됐으며 양국간 교류 협력과 친선 증진 및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美, 200억달러 무역금융 지원키로(12/5)

- 중국과 미국이 5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달러(2조9천540억원)를 공동 투입키로 했음.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양국간 수출입 은행이 공동으로 200억달러를 출연해 무역금융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미국측 단장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밝혔음.
- 폴슨 장관은 이날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200억달러의 이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공개된 합의문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입은행은 12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도 8억달러의 투입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미 양국의 수출입 업자들을 지원할 예정.

● 中,美, 전략경제대화 개막...위안화 환율 논의(12/4)

- 세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4일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 들어갔음.
-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단골 메뉴인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최근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
- 폴슨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맥코믹 재무부 차관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듭 요구했음. 폴슨 장관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노력을 촉구했음.
- 폴슨 장관은 "중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맥코믹 차관도 지난 1일 워싱턴에서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납하고 무역장벽을 설치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무역장벽 철폐 문제, 에너지, 환경보호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미국발 금융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 이에 맞서 중국은 돈을 풀어주겠으니 에너지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 中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환영”(12/2)

- 중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게 된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일 홍콩에서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 아시아’ 개막 총회에 참석, “힐러리와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힐러리가 국무장관에 지명된 것을 축하했음.
- 힐러리는 앞서 중국이 ‘북핵 6자회담’에서 담당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6자회담을 토대로 동북아 안보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중 외교에 비중을 둘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힐러리는 또 미-중 관계야말로 21세기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음.

● 中美, 전략경제대화서 ‘전략적 협력’ 논의(12/1)

-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오는 4일 베이징에서 제5회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 관심은 중-미 양국이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양국간의 상호 이해에 맞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협상을 하느냐에 쏠리고 있음.
- 미국측 수석 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 의제로 에너지, 환경보호, 그리고 쌍무투자보호협정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폴슨 장관은 이밖에 중국 화폐인 런민비(人民幣)의 평가절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런민비 평가절상 문제는 이제 ‘양국간 전략’에 주요 자리를 물려줬다는 것이 중국측 분석.
- 칭화(淸華)대 중미관계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저우스젠(周世儉) 교수는 1일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측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책임이 중국의 평가절하된 런민비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자인한 만큼 런민비 평가절상 압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 전략적 방안은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에 대중 수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늘려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대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제공받자는 것으로 압축됨. 우선 에너지와 환경보호 문제에서 이런 중국의 속내가 드러남.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원자력 발전소 40기를 건설할 계획.
- 중국은 이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무역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대신 첨단 기술을 받고 싶어한다. 풍력, 수소에너지, 태양광, 비식량성생물에너지 등 신에너지 개발분야도 마찬가지. 중국은 또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대가로 훼손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기술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은 미국에 에너지, 환경보호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1천억달러 이상의 시장을 여는 대신 선진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국의 의도는 투자 분야에서도 다를 바 없음. 조만간 2조달러를 돌파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 미국의 선진기술, 공장, 에너지, 광산 등의 자원에 투자해 미국의 경기 회복과 고용에 기여하겠으니 투자를 보장해 달라는 주문인 것.
- 미국이 중국의 이런 '전략적 협력'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함.

마. 기타

● 한-폴란드 정상, 경제협력 확대키로(12/5)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음. 양국간 정상회담은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해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에프스키 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약 4년 만임.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현안과 함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특히 양 정상은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폴란드가 중동부 유럽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구체적인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및 원전 건설, 도로·지하철 건설 등 폴란드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음.
- 이에 대해 카친스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대(對) 폴란드 SOC 사업 진출 확대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한국 기업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내년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관계를 더욱 돈독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양 정상은 각 분야의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 카친스키 대통령은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승수 총리 면담, 한국외국어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한총리, 중동순방 마치고 내일 귀국(12/2)

- 한승수 국무총리가 5박7일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
- 한 총리는 2일(현지시각) 마지막 순방국인 터키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이동, 터키상공회의소 산하 대외경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간 협력 강화를 당부한 뒤 터키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기업인 대표들과 만찬을 갖고 격려할 예정.
- 한 총리는 순방 기간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를 차례로 방문해 국제사회 개발재원 확대 및 금융위기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 협력 등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을 펼쳤음. 그는 중동 순방 성과와 관련,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3국은 우리의 전통적 우방으로 이번 순방기간에 그동안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한총리, ‘2단계 자원외교’ 마무리(12/2)

- 중동지역 순방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가 2일(현지시각) ‘2단계 자원외교’를 마무리했음. 한 총리는 지난 5월 중앙아시아에서 자원외교를 펼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자원부국인 중동지역 국가들을 방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그는 이번 순방기간 카타르, 쿠웨이트를 방문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의 안정적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터키에서는 원전협력 의사를 타진했음.
- 총리실은 이번 순방에서 석유광구 개발 등 직접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없었으나 자원부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에너지 수출원으로 주목받는 원전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음.
- 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협력 외교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며 “자원외교의 1단계는 자원을 직접 개발해 상호호혜 관계를 다지는 것이고, 2단계는 이미 협력하고 있는 나라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협력외교”라고 밝혔다.
- 실제로 이번 순방기간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총리에게 “한국은 중요한 고객인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LNG와 석유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쿠웨이트 국왕은 터키로 이동하는 한 총리를 위해 왕실 전용기를 내주는 성의를



보였음. 한 총리는 또 터키에서는 한국형 원자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며 원전협력 의사를 타진했음. 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으로 일하고자 하며 2009년 흑해지역 원자로 입찰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뒤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며 경제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했음.

-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3단계 자원외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4단계 자원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음.

● 한총리, 터키서 원전 협력 추진(12/2)

-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현지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원전협력 의사를 터키측에 타진했음.
- 총리실은 “한국은 지난 9월 24일 조건이 맞지 않아 터키 아쿠유 원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터키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및 기타 전력분야 협력, 무역 및 투자확대, 방위산업과 SOC 진출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음.
-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카타르 방문시 현지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원자료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며 “설계 제작, 건설, 사업관리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한번도 팔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원전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 정부에 따르면 모두 20기의 원전을 보유, 세계 6위권 규모인 우리나라는 1천MW급과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는 등 1990년 이후 11기의 원전을 준공했으며 1천400MW급 원전건설 단가는 kW당 1천74달러로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값이 싼.
-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331기의 원전 신설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은 원전 수요 확대에 대비해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베트남, 태국, 핀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 9개국과 원자력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데다 한 총리도 터키측에 원전협력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정부의 원전수출 구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한 총리는 이어 양국 총리회담에서 정유공장 건설, 고속철도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터키측의 협조를 요청했고, 전자정부와 와이브로, DMB 등 IT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음.
- 그는 또 한국이 2009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금융체제 개편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G20 소속 국가인 터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음.

● 한-요르단, 원전.대수로건설 협력키로(12/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방한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양 정상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요르단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 등을 통해 향후에도 호혜적이고 쌍방향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
- 압둘라 2세 국왕은 회담에서 요르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홍해-사해간 대수로 사업 및 담수화설비 공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자원빈국인 요르단은 2040년까지 국내 전력의 30%를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사해'(死海)의 수량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들여 홍해와 사해를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양국은 정상회담 후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 및 대수로사업 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한국전력-요르단 원자력위원회, 코트라-요르단 투자청,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했음. 아울러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중 주한 요르단 대사관을 설립키로 합의했음.

● 한총리, 쿠웨이트서 에너지협력 논의(12/1)

- 한승수 국무총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30일(현지시각) 쿠웨이트를 방문, 에너지분야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 한 총리는 이날 사바 국왕과 나세르 총리를 면담,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쿠웨이트측의 투자 및 선박수주 확대, 방위산업.문화.교육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요청했음.
- 이에 나세르 총리는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양국이 지역, 국제현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 총리는 또 자심 모하메드 국회의장과 무바라크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 알 올레임 석유부 장관 겸 수전력자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양국 에너지협력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에너지 개발분야 공동투자, 의회교류 및 국방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음.